

## “비정규직 더는 죽이지 말라”

비정규직 대표 100인, 문재인 대통령 직접 대화 요구 ... “12월 21일 광화문에서 기다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만나자고 요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2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그만쓰 ‘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은 12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남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투쟁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비정규직 제로 시대,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며 대통령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 공동투쟁은 “적폐 청산 대상인 재벌과 여러 번 만난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공동투쟁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과 사용자 처벌 ▲공공부문 제대로 정규직 전환 ▲



노조법 2조 개정과 기간제법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 고용안정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생명안정업무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노동삼권 ▲여성 비정규직 성폭력, 성희롱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최저임금 등 ‘8개 대화 주제’를 발표했다.

공동투쟁 기자회견에서 각 부문 대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혹한 노동현장의 실태를 고발했다. 발전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이태성 노동자는 “오늘도 동료를 잃었다. 석탄 이송 설비에 머리가 끼여 머리와 몸이 분리돼

죽었다. 스물네 살 꽃다운 청년이 죽은 시각도 알 수 없다. 사고 나고 여섯 시간이나 방치됐기 때문이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 운반 설비 점검 중 사망했다. 10일 밤 10시 20분경 연력이 끊긴 스물네 살 하청 노동자는 새벽에서야 숨진 채 발견됐다. 이태성 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안 돼도 좋으니 더는 죽이지 말라”라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촉구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하나의 신분 이 돼버린 비정규직 문제가 문재인 정부 발목을 잡을 것이다. 더는 불평등 문제 해결을 선언만 하고 내버려 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 신상기 대우조선지회장 고공농성 돌입

11일, 2018년 단체교섭 연내 마무리 위해 크레인 올라... “12월 14일까지 교섭 마치지”

신상기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쟁위대책위원회 의장이 12월 11일 새벽 2018년 단체교섭 연내 마무리를 위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신상기 지회장이 오른 크레인은 1도크 40m 높이 크레인이다.

노조 대우조선지회는 기본급 4.1% 인상,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 상여금 분할 철폐, 임금체계 제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4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지회 임원진은 식발투쟁과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채권단인 산업은행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회는 소식을 통해 “사측은 산업은행과 채권단의 눈치를 보느라 노동조합이 마지노선으로 걸었던 날씨가 다가옴에도 현장 노동자들이 바라는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

며 “사측이 끝까지 고집하는 상여금 600% 월할 분할을 막아내고, 2018년 단체교섭이 모든 조합원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지회는 이날 4시간 파업투쟁을 함께 전개했다.

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오는 14일을 연내타결을 위한 교섭의 날로 제시했다.

# 포스코, 노조파괴 본색 드러내 ... 민주노조 간부 세 명 해고

일방 징계위 열어 지회 집행부 해고, 정직... “포스코, 발각 시나리오대로 노조파괴 나서”

포스코가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들을 징계 해고했다. 포스코는 한대정 포스코지회장을 징계해고하고, 이철신 사무장과 김의현 기획부장을 권고 해직했다.

포스코는 12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다섯 명의 조합원에게 해고와 정직 처분을 내렸다. 포스코는 징계 대상자들이 지난 9월 23일 포스코 포항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계했다. 신동훈 정책부장과 황영길 지도위원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회사가 추석 연휴 기간 노무협력팀을 중심으로 금속노조 무력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잡기 위해 포스코 인재창조원을 찾아갔다. 포스코지회는 당시 회사가 준비한 노조 대응 문건과 노사문화그룹 직원의 수첩을 통해 회



사가 금속노조 파괴를 모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포스코는 문건에 따라 대항 노조를 지원하는 태도를 보이고, 금속노조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하는 등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회사는 지회가 발견한 부당노동행위 증거에도 자신들의 불법에 입을 닫았다. 오히려 노무협력팀의 업무를 방해하고 문서를 탈취했다는 이유로 지회 간부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노조 포스코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는 언론에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대

화하겠다고더니, 뒤로는 노동자를 해고했다”라며 “포스코가 노조와해 모의라는 부당노동행위로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비난 여론이 가라앉자 부당함을 알린 노동자를 징계했다”라고 지적했다.

포스코지회는 “노조와해 공작으로 삼성 재벌 범죄자들이 쇠고랑을 차고 쌍용차에서 해고자를 복직시키자는 사회합의가 있었다. 포스코는 이런 사례를 교훈으로 삼기보다 시겟비늘을 뒤로 돌리고 있다”라고 회사의 조치를 비판했다.

포스코지회는 “포스코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교섭대표 노조를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로 결정하자마자 준비했다는 듯 지회 지도부를 징계해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포스코가 노조파괴 시나리오대로 지회 집행부를 해고했다며,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 법정구속... “법 핑계 사법부 폭거”

울산지법, “(금속)노조 성향상 피고 주장 배척” ... “노조혐오 반헌법 인식 재판부 판결”

금속노조가 울산지방법원의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대한 실형 10개월 선고에 대해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으려는 과도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즉각 석방하라”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12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박세민 동지 석방, 울산지방법원 규탄 금속노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1단독 오창섭 판사는 12월 6일 박세민 노안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민원인에 대한 불필요한 제지와 압박에 항의하던 중 우발사고가 벌어졌다. 의도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실 확인서가 이를 말해주고 검찰이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신승민 수석은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고, 누구도 실형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과도한 판결이다. 사법부가 법을 핑계삼아 폭거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박다혜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판결문

을 보면 노조 성향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목이 있다. 재판부가 생각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성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은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이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항의 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